07-09 |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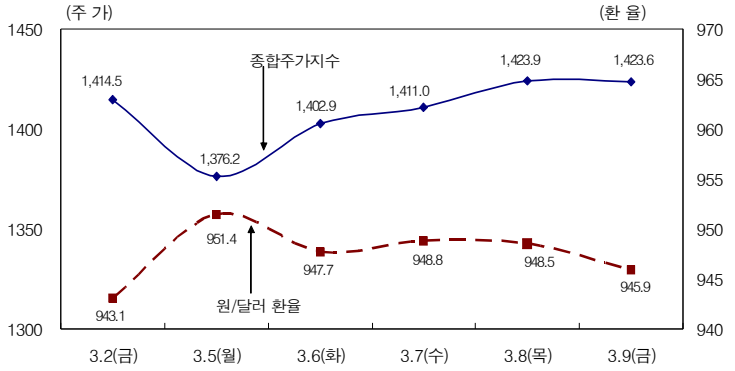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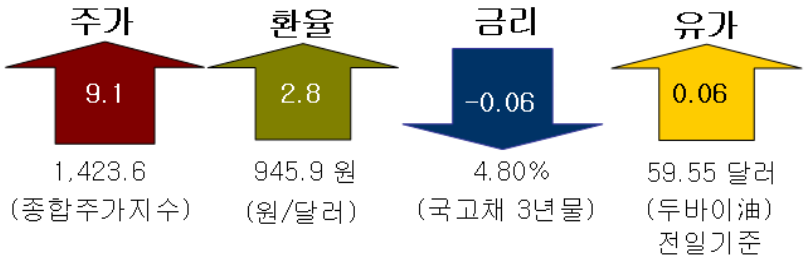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3.2~3.9)





주가	환율	금리	유가
1,423.6 (종합주가지수)	945.9 원 (원/달러)	4.80% (국고채 3년물)	59.55 달러 (두바이油) 전일기준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1

월간 경제 동향 14

□ 실물 부문 : 수출 경기 호조 지속 14

□ 금융 부문 : 글로벌 금융시장 빠르게 회복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홍 순 직 수석 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1. 북핵 협상 진전 추이와 합의 배경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핵 협상은 북미 베를린 양자 회동을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이는 북미 모두 국내외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대립은 양자 모두에게 得보다 失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중동 현안 등의 우선 해결 과제가 있는데다가, 북핵 해결이 지연될 경우 자칫 북한의 핵 보유고가 늘어나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핵실험 이전의 '의도적 무시 전략'과 완전한 핵폐기(CVID)에서 '협상 전략'과 추가 핵활동 동결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先易後難의 접근 전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북한 역시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선전을 통한 체제 결속 강화와 대외 협상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이 실현된 만큼, 경제 실리 확보 차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2.13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등가성과 동시 이행 원칙' 하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이행 조치를 담은 2.13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핵프로그램 신고하는 데에 대해, 여타 참가국들은 상응 조치로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을 제공키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이행 조치를 '동결 - 폐쇄·봉인 - 불능화 - 완전 폐기'로 구분하고 이행 단계별로 차등화된 보상책과 구체적인 이행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추진의 실효성과 합의 이행의 구속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별도의 실무그룹 구성 등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제가 구체화·제도화되었고, '평등과 형평'의 원칙으로 5개국이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말 對 말'의 합의였던 9.19 공동성명이 '행동 對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된 셈이다.

향후 북핵 합의는 적어도 초기 단계 이행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초청 등을 비롯하여, 회원국들이 합의 이행을 위해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해석 차이와 기존 핵무기 및 고농축 우라늄(HEU) 등에 대한 명시 부재로 불능화 단계 및 완전 핵폐기까지에는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특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핵시설의 폐쇄는 물론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핵물질의 외부 반출과 고농축 우라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결되어야 한다.

3. 향후 남북 관계 및 경협 전망

북핵 협상 타결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경협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 영향이 기대된다. 우선 남북 관계는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북핵 이전 상태로 복원되면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도 통일·안보 정책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가시화'로 삼고,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중단된 대북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북핵 및 북미 관계 진전 상황과 속도를 맞추면서,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남북 경협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간의 경협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 단계 합의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행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제12차 남북경추위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SOC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OC 부문은 남포항 현대화 및 철도 개보수 사업을 비롯하여 전력·통신 사업 등이 유력하다. 나아가 북핵 불능화 단계까지 진전될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철도 연결과 에너지 개발 사업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의 경협 역시 전반적인 경협 확대 분위기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교역은 정부와 민간의 경협 사업 확대는 물론, 이로 인한 원부자재와 장비 반출입의 증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4.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한반도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 목표 하에, 양자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란 군사·안보 측면의 '평화'와 경제 측면의 '번영'이 상호 상승 작용하면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융합 형태로, '번영을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번영'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단계의 2.13 합의 이행으로 북미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다음 단계의 북핵 폐기 과정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북미간은 물론, 남북과 한·중·일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은 북핵 합의 이행과 인권 개선 등의 세계적 흐름에 동조하면서, 당·군·정의 일치된 개혁·개방 의지 천명과 각종 법·규정의 재정비로 외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 발전을 통해 북핵 합의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와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대화 정례화와 제도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갈등적·경쟁적' 공존 관계에서 '협력적' 공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통일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인 경협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칭)의 구성을 검토할만하다. 한편, 미국은 역내 안정자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인 동시에 분단 책임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 일본 역시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의 분리 해결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

북핵 합의 배경

북핵 협상은 북미 베를린 양자 회동을 계기로 급진전

- (미국) 중간선거 패배와 중동 현안 등으로 현실적 접근으로 변화
  · 무시 전략→ 협상 전략, 완전 핵폐기(CVID)→ 先易後難 전략
- (북한) 경제 실리 확보 차원의 선택
  · 핵실험으로 군사강국 건설과 체제 결속 강화 성과 달성
- (중국)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 위해 적극적 중재자 역할
- (한국)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제안과 외교적 수완 발휘

2.13 합의 의미

초기 단계의 구체적 실행 계획(action plan) 마련

- 대화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노력의 유용성 재확인
- 제네바 합의보다 추진의 실효성과 이행의 구속력 제고
  · 이행 단계별 차등화된 보상책과 구체적인 이행 시한 명시
  · 등가성과 동시 이행의 원칙 도입, 평등과 형평의 원칙 분담
- 5개 실무그룹 설치로 협의 의제의 구체화·제도화
  ·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경제·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의 실무그룹 구성
- 이로써 '말 對 말'의 합의였던 9.19 공동성명이 '행동 對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실행 계획 마련

남북 관계 영향

남북 관계 복원과 경협 활성화 기대

- 남북 관계 정례화와 대북 포용 정책 추진의 추동력 강화
  ·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 성사
  · 북핵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 유도
- 정부의 지원성 경협 사업은 물론, 민간 경협도 확대 전망
  ·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 가동 예상
  · 북핵 진전시, 남포항 현대화 및 철도 개보수 등 SOC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실현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축 기반 조성

- (북한) 북핵 합의 이행과 인권 개선 노력 등의 세계적 흐름에 동조
  · 지속적인 개혁·개방 추진과 법·규정 재정비로 외자 유치 여건 조성
- (남한) 민족공조(남북대화)와 국제공조(6자회담) 균형 속에 여건 조성
  · 남북 관계를 갈등적·경쟁적 관계 → 협력적 공존 관계로 발전
  · 지속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개발로 '남북 상호 발전 체계' 구축
  · 시중 부동자금의 통일기금화 추진,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
-(주변국) 북핵 합의 이행과 개혁·개방 유인 제공으로 북한 변화 지원
  · 미국은 역내 안정자로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과 분단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 일본은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의 분리 해결 원칙으로 북핵 해결 동참

□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1. 북핵 협상 진전 추이와 합의 배경

○ (진전 추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핵 협상은 북미 베를린 양자 회동을 계기로 급진전되었음

- 하노이 한미정상회담('06. 11. 18)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국전 종전 선언과 공동서명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

- 이는 부시 대통령이 '폭군'으로 칭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북 '정권 교체'(regime change) 시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 나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

- 북미 베를린 회동('07. 1. 16~18)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2.13 합의의 발판을 제공하였음

- 형식면에서는 비록 '6자회담 틀 내에서 회기간 회동'(inter-sessional meeting)'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이 열린 이래 중국의 중재 없이 이루어진 최초의 실질적인 북미 양자 회담이었음
- 시기적으로도 미국이 지난해 12월의 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측에게 '패키지 딜'[1]을 제시한 후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BDA(Banco Delta Asia)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측 제안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내용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BDA 문제를 미국이 '30일 이내에 합법 자금의 동결 해제'로 양보하는 대신, 북측의 '60일 이내의 초기 조치 이행'을 얻어낸 미국의 현실적 접근 전략으로 평가
- 이로 인해,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문제를 합의하는 데 집중하였음
- 따라서 2.13 합의 도출은 BDA 문제와 상응 조치 등의 핵심 의제에 대해 그간의 사전 준비 모임의 결과물로 해석

---

1) 패키지 딜이란 미국이 북한에게 북핵 폐기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 가운데 '동결과 신고'의 초기 이행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한 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 제안한 것임

○ (합의 배경) 북미 모두 국내외 여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대립은 양자 모두에게 得보다 失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

- 미국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중동 현안 등의 우선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전보다 유연한 대북 접근 전략을 보였음
  - 중간선거 이후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볼턴 UN 대사 사임 등으로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음
  - 부시 대통령은 힐 차관보-라이스 국무장관-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통해 이번 6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음
  - 또한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돌파구로서 북핵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된 반면,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무력 공격도 여의치 않고 UN 회원국들의 대북 결의안 참여도 미흡하여 실질적 압박에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
  - 더욱이 북핵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한의 핵 보유고는 늘어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이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핵 실험 이전의 '의도적 무시 전략'과 완전한 핵폐기(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협상 전략'과 추가 핵활동 동결과 핵확산 방지의 '쉬운 문제의 우선 해결'(先易後難)'이란 현실적인 접근 전략으로 변화된 듯함
  - 즉 미국은 '대화는 하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 없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로 입장이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

- 북측은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선전을 통한 체제 결속 강화와 대외 협상력 제고의 목적이 실현된 만큼, 경제 실리 확보 차원으로 접근 자세가 변화하였음
  -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핵실험으로 군사강국 건설과 체제 결속 강화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이제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건설'에 주력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 군사 부문보다 경제 부문을 우선 거론하였음. 이는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난과 민심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또한 지금은 춘궁기 대비는 물론, 2007년이 김주석 95회 생일(4. 15)과 김위원장 65회 생일(2. 16), 인민군 창건 75돌(4. 25) 등 큰 행사가 있는 '꺾어지는 해'인 만큼, 많은 행사 준비를 위한 선물이 필요한 시기임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BDA 선별 해제 합의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한 만큼, 더 이상의 핵 해결 지연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기보다는 경제 실리를 선택하였음

- 중국은 북핵 실험 이후의 실추된 위상 회복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미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였음

- 중국은 6자회담 재개와 북핵 해결의 주도국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워싱턴과 평양에 파견
- 또한 중국은 북핵 해결을 통해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과 탈북자의 중국 유입 증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미 무역 흑자 유지를 위해서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견제와 균형'의 대미 외교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 다시 말해 중국은 6자회담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발언권 강화 및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부각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음

- 우리 정부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제안과 중재자 역할도 이번 합의 타결에 초석과 촉매제 역할을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해법의 이른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와 이번 합의문 타결의 기반을 조성하였음
- 또한 이번 합의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분담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역할과 함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음

2. 2.13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주요 내용) 6자회담 참가국들은 등가성과 동시 이행 원칙 하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이행 조치 합의서를 채택함

-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핵 프로그램 신고 조치에 대해, 여타 참가국들은 상응 조치로 대북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함
  - 북한은 60일 이내 핵시설의 동결 및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함
  - 이에 대한 대가로 참가국들은 60일 이내에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이행하기로 함
  - 또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함
  - 이외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며, 차기 6자회담은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북 지원 분담에 있어서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이후 참여하기로 함

-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5개 실무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同,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등임
  - 이 가운데 한국은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경제 및 에너지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3월 둘째주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
  - 특히, 북미 양자 대화를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의 의제가 분명해졌음

○ (타결의 의미) 핵폐기 조치의 구체화와 이행 시한 명기 등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북핵 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됨

- 북핵 해법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노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 미국은 대북 압박 위주의 북핵 해법에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적·인도적 지원 등의 보상 조치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도발이나 사태 악화 예방에 합의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
  - 초기 단계가 이행되어 북미 상호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는 북핵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상호 불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북핵 해결 이행 조치 합의와 성실한 이행의 단초를 제공할 것임

- 북측의 이행 단계에 따른 차등화된 보상책과 구체적인 이행 시한 명시 등으로 추진의 실효성과 합의 이행의 구속력이 제고됨
  - 북한의 이행 조치를 동결(freeze) - 폐쇄·봉인(shut down & seal) - 불능화(disabling) - 완전 폐기(dismantlement)로 구분하여, 북한의 이행 단계에 따라 상응 조치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가성과 동시 이행' 원칙을 도입
  - 또한, 초기 이행 시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이외에도 실무그룹 구성 등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제가 구체화 제도화되었고, 한국측 부담이 줄어든 것도 큰 성과로 지적
  - 5개 실무그룹 구성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제도화될 수 있음
  - 또한,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5개국이 배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네바 합의에 비해 한국측 부담이 줄어듦

- 이로써 '말 對 말'의 합의였던 9.19 공동성명이 '행동 對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이 마련됨

○ **(북핵 협상 전망) 가동 중인 핵시설 중단에 초점을 맞춘 초기 단계 조치까지는 이행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됨**

- **남·북·미 3국은 합의 이행을 위해 활발한 외교 노력을 진행 중에 있어, 초기 단계의 이행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 북미간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뉴욕(3. 5~6)에서 힐 차관보 등과 만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대한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협의를 가졌음
  - 회담이 잘 풀릴 경우 힐 차관보의 답방 가능성이 있으며, 핵 불능화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에는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라이스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 특사의 방북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간에는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2. 27~3. 1)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3. 1~3)의 訪美에 이어 네그로폰테 부장관(3. 5~7)의 한중일 순방 등으로 양자간 입장 조율이 이루어졌음
  - 특히, 북한이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초청한 것은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의지와 진실성을 시사하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
  -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2. 28~3. 2)에 이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3월 둘째주에 실무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5만톤의 중유 제공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00억 원을 지출키로 결정

< 북한의 핵 폐기 및 상응 조치 로드맵 >

	합의 60일내(~4. 14)	핵 불능화 단계	폐기 단계 (예상)
북한	-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 IAEA 사찰관 복귀 요청 - 핵포기 대상 목록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현존 핵 시설 불능화	-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물질, 핵무기의 완전 폐기 *미국, '08. 12월 완료 목표
여타 참가국	- BDA 동결자금 일부해제 - 5개 실무그룹 회의 가동 - 중유 5만 톤 긴급 지원 - 6차 6자회담 재개(3. 19) - 북미 양자 대화,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협의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6개국 외교장관급 회담 - 남북한 미·중,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상 (별도 포럼 운영)	- 경수로 제공 및 평화적 핵이용 -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 한반도 평화협정 서명

○ (쟁점) 합의문의 해석 차이와 기존의 핵무기 및 고농축 우라늄(HEU) 등에 대한 명시 부재로 불능화 단계 및 완전 핵폐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존재

- 합의문의 용어에 대해 북한과 회원국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총련 상임위 의장은 폐쇄와 완전 폐기의 중간 단계인 불능화(disablement)에 대해, '임시 가동 중단'으로 해석
  - 다만 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아니므로, 내부의 반발 무마와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이중 용도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존재

-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핵시설의 폐쇄는 물론,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핵물질의 외부 반출 및 고농축 우라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 해결되어야 함
  - 합의문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번 합의에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에 비해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누락되어 있음
  - 또한 불능화 이후 단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며, 북한이 경수로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과 검증을 이행할 지가 의문시됨
  - 이외에도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간 대립으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이 원만히 진행될 지 여부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특히 한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분담금 외에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과 2005년 7월의 200만 kW 대북송전 제안 등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키로 함에 따라, 이것이 정확한 균등 분배인지는 불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북한의 추가 이행 조치로 총 100만 톤(3,000억 원)의 대북 중유를 균등 분담할 경우에도 3년간 한국은 약 1,800~2,000억 원을 부담해야 함
  - 또한, 중단된 식량과 비료 제공(수송비 포함 약 2,800~3,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4,600~5,0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임

3. 향후 남북 관계 및 경협 전망

○ **(남북 관계) 북핵 협상 타결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북핵 이전 상태로 복원되면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 문제 우선 해결과 민족공조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을 촉구하는 각종 성명과 담화문을 발표
  - 우리 정부는 2007년 통일 안보 정책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가시화'로 삼고,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남북 관계 실현'을 2007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6대 전략 목표와 19개의 세부 성과 목표를 설정 (☞ <참고 2> 「2007년도 통일부 업무 계획」 참조)
  -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6자회담과 남북 회담을 병행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 추진한다"는 방침임
  - 따라서 정부는 중단된 대북 쌀·비료 등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물론, 북핵 및 북미 관계 정상화와 속도를 맞추면서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

<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남북 관계 북핵 개선	-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관련 문제 협의 해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2.13합의가 이행되도록 공동노력 - 민족 화해와 단합 행사에 적극 참가(6.15 및 8.15 민족통일대축전)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5. 29~6. 1)
인도적 지 원	-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협의(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4. 10~12) - 대북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제공
경제 협력 확대 발전	-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평양, 4. 18~21) -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상반기 내 열차 시험 운행 -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협력

○ (남북 경협) 2.13 합의와는 별도의 정부 지원성 경협 사업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간의 경협 사업도 확대될 전망

- 단기적으로는 초기 단계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행될 경우에는 지난 6월의 제1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SOC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2.13 합의에 명시한 100만 톤 상당의 대북 지원과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 다만 파종기와 춘궁기의 긴급 구호성 쌀 비료분을 제외하고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핵 및 남북 관계 진전 상황과 국민 여론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북핵 진전이 있을 경우, 2.13 합의의 에너지 분야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지원성 경협 사업이 확대될 전망
  - SOC 부문은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남포항 현대화(40억 원) 및 철도 개보수(10억 원) 사업과 전력·통신이 유력함
  - 나아가 5월 이후 북핵 불능화 단계까지 진전될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한 철도 연결과 에너지 개발 사업 등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

※ 제1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2006. 6. 6)의 주요 합의 내용
- 남북 철도 시험운행이 실시되면 8,000만 달러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협력
-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
- 이외에도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을 협의

- 전반적인 경협 활성화 분위기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의 경협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개성공단 사업** : 공장 가동의 확대는 물론, 미사일·핵 문제로 중단된 1단계 잔여 부지의 분양 재개와 기분양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 모집 공고, 하반기의 2단계 부지 조성 사업 추진 등으로 활기를 띨 전망
  - **금강산관광 사업**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 내금강 및 골프장 개장과 관광 구역 확대 기대, 북핵 진전에 따르는 관광 심리 회복 등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남북 교역** : 정부와 민간 차원의 경협 사업 확대는 물론, 이로 인한 원부자재와 장비의 반출입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5.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 (기본 방향) 6자회담국들은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형성이 동북아의 갈등 해소와 평화 번영의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첫걸음이란 데 인식 공유

- 무엇보다 2.13 합의가 실질적인 북핵 폐기 과정으로 진전되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시급

- 초기 단계 이행 조치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미간 적대 관계 해소와 상호 신뢰 형성이 이루어져, 다음 단계의 북핵 폐기 과정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북미간은 물론, 남북과 한·중·일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긴요
- 특히,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요 해결 주체자란 인식 하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실무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자간·양자간 중재 노력이 요구됨

○ (남북한 역할) 북한은 세계 평화와 인권 개선의 국제 흐름에 동조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된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남한은 통일경제적 시각 하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2]의 구축의 기반 조성에 역점

- 우선 북한은 북핵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의 세계적 흐름에 동조하면서, 당·군·정의 일치된 개혁·개방 의지 천명과 실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북핵 합의 이행과 인권 및 북미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테러 지원국과 인권 탄압국의 오명을 벗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개혁·개방 추진은 물론, 각종 법·규정의 재정비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외자 유치와 국제기구 가입 여건을 충족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 목표 하에, 양자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절실

-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 발전을 통해 북핵 합의 여건 조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역내 평화번영의 중재자적 역할 수행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2)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군사 안보 측면의 '평화'와 경제 측면의 '번영'이 상호 상승 작용하면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융합 상태로, '번영을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번영'의 동시 추구를 의미함(조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목표와 형성 전략』, 통일연구원, 2006. 12.)

- 또한 경제 부문은 물론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남북 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여, 남북 관계를 '갈등적·경쟁적' 공존 관계에서 '협력적' 공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경협 부문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통일경제적 시각 하에, 남북 경협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장기적인 경협 파트너로 육성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협력 모델과 '상호 발전 체계'를 구축
- 북한 경제 회생과 개혁·개방 지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인프라 구축, 남북 연계 개발 등을 본격 논의할 가칭 '남북경제공동위원회' 혹은 '민족경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합동시찰단의 운영도 검토
- 또한 통일 펀드 조성과 시중 부동자금의 통일 기금화 등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과 함께, 경협 재원의 신축적 운용도 필요함
- 이외에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한 국가적 리더십(leadership) 확보 못지않게, 국민들도 정책 입안자와 외교진들이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적 열정과 followship이 필요

○ (주변국 역할) 2.13 합의 이행과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유인을 제공하여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측면 지원이 요구됨

- 미국은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담한 접근법 시도와 함께, 동북아의 왜곡된 역사 인식 교정과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내 안정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

-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인 동시에 분단 책임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요구됨

- 일본은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의 분리 해결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

- 나아가 과거사 해결과 동북아 평화, 대북 경제 교류 확대를 포함한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대북 배상금 협상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노력이 요구

홍순직 수석연구위원(3669-4182, sjhong@hri.co.kr)

< 참고 1 > 북핵 관련 주요 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1991. 12. 31	-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 5. 23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5. 23~6. 5)
1993. 3. 12	-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 5. 11	- UN, NPT 탈퇴 철회와 NPT 의무 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1993. 6. 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1994. 10. 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1994. 11. 1	- 북한, 핵 활동 동결선언
1995. 12. 15	- 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1997. 7. 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2000. 2. 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 합의 파기 경고
2002. 9. 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 10. 3~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 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시인 주장
2002. 11. 14	- KEDO, 대북 중유 지원 중단 발표
2002. 12. 12	- 북한, 핵동결 해제 발표(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IAEA사찰단 철수)
2003. 1. 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 2. 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 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 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5. 2. 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 5. 11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2005.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9.19 공동성명' 채택
2006. 6. 1	- 북한 외무성의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미측 거부
2006. 7. 5	- 북한, 대포동 2호 등미사일 발사
2006. 7. 16	- UN안보리, 북한 미사일결의(제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2006. 10. 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2006. 10. 9	- 북한, 핵실험 실시
2006. 10. 14	- UN안보리, 대북 제재안 가결
2006. 10.18~21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한·중·러 순방
2006. 10. 19	- 김 위원장, "조건부 2차 핵실험 유보 및 6자회담 복귀" 발언 - UN, 대북 제재위원회 출범
2006. 10. 31	- 북 미 중,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2006. 11. 1	- 북한 외무성, "금융제재 논의 해결 전제 아래 6자회담 복귀"
2006. 11. 18	- 부시대통령, "종전 선언과 서명" 의사 표시(하노이, 한미정상회담)
2006. 11.28~29	- 미국, 베이징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에게 '초기 이행 종치' 제안
2006. 12.18~22	- 2단계 제5차6자회담, 북한의 先BDA 해결 주장으로 성과없이 폐막 - 방코델타아시아(BDA) 포함한 북미 금융 1차실무회의(12.18~19)
2007. 1. 16~18	- 북미 베를린 회동 ·미국의 선별적 금융제재 해제에 북한도 초기이행조치 준비 시사
2007. 1. 30~31	- 북미 금융 2차실무회의, 미국 "이번 회의는 생산적"이라고 평가
2007. 2. 8~13	- 3단계 제5차 6자회담, '2.13 공동 합의' 채택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대북 지원 분담에 합의
2007. 3. 5~6	-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협의 (김계관 부상- 힐 차관보)

< 참고 2> 2007년도 통일부 업무 계획

전략 목표	성과 목표
1.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 촉진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 군사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 - 직접 당사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2.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 추진	○ 남북 경협 확대 여건 조성 -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사업의 성공적 추진 - 민간의 경협 확대 및 내실화 지원 ○ 공동 남북 경협 사업 확대 - 공동 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발전 모델 모색 - 농수산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임진강 수해 방지 및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사업 등 ○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 여건 마련 -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기술 분야 인적 자원 개발 지원
3.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 사업의 단계적 발전 추진 - 1단계 기반 시설 마무리, 추가 분양 - 기술교육센터 완공,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국제수준의 법규 환경 조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 입주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 지원 ○ 국내외 투자 환경 조성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원산지 문제 해결 -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4.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 이산가족 교류 프로그램 안정적 시행 -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인도적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 쌀 비료 지원 검토, 중장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 새터민 자활 체계 구축
5.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다변화·제도화 ○ 민족문화유산 교류 협력 확대
6. 대북 정책 추진 기반 확충	○ 남북 회담의 제도화 및 정례화 ○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평화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 운영 - 국민 역량 함양을 위해 '평화교육' 실시 ○ 대북 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의 고위 및 실무정책 협의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수출 경기 호조 지속

○ 2월 수출 증가율은 1월의 전년동월대비 20.9%보다 하락한 11.3%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7.5%가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2.0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냄

-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전년동월대비 19.6% 증가), 석유화학(26.6%)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자동차(1.7%), 선박(-1.7%) 등은 부진한 모습을 기록

- 수출 대상 지역별로는 미국(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EU(14.9%)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중국 수출증가율은 1월의 31.6%에서 2월에 12.8%로 크게 둔화

- 수입 용도별로는 원자재 및 자본재 증가율이 각각 4.1% 및 2.9%로 미약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재의 경우 27.6%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강화, 미국 경제의 주택 경기 급래 우려 등으로 향후 수출 경기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4.0	5.0	6.1(1.2)	5.3(0.8)	4.8(1.1)	4.0(0.8)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5.3	3.1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2.3	16.0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9.8	9.7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2.3	20.9	**11.3**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0	7.4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99	2,273	-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3	3.6	-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8	20.5	**7.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1	-5	-
	무역수지(억$)		232	161	13	48	25	75	13	3	**1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1	1.7	**2.2**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6	1.9	**2.4**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글로벌 금융시장 빠르게 회복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세

- **금리** : 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 및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스왑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 등으로 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4.50 → 4.51%)
- **환율** : 달러화는 최근 약세에 따른 조정 등으로 유로화에 대하여 강보합세, 유럽과 뉴질랜드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의 재개 움직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엔화에 대하여 강세 ($/€ : 1.3192→1.3133, ¥/$:116.81→117.17)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

- **주가** : 주 초반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로 1,376p까지 하락하였으나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되면서 급반등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1,414.5→1,423.6)
- **금리** :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4.5%)한 가운데 외국인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채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됨에 따라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86→4.80%)
- **환율** : 주 초반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951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역외거래자를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성 매물 출회 및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으로 마감 (943.1→945.9)

○ (전망)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세 확대로 원화 환율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3.2.	**3.9.[1)]**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14.5	**1,423.6**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4.86	**4.80**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3.1	**945.9**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114	**12,261**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18	**17,090**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50	**4.51**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67	**1.63**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192	**1.3133**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6.81	**117.17**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9.49	**59.5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8.) 기준